

원저

북한 3대 정권의 군사력 변화와 방산안보 시사점

박진영

육군 소장(예비역)

교신저자: 박진영 (pjyroka@naver.com)

요약

본 연구는 북한이 고립과 경제적 한계 속에서도 군사력 포트폴리오를 공세적으로 고도화한 인과 기제를 구조적·신고전적 현실주의 북한 프레임워크로 분석하였다. 북한의 군사적 선택은 국제구조의 변화를 지도자의 인지 필터와 북한 내부 엘리트 연합의 이해관계로 투사한 제한된 전략적 합리성의 산물이며, 이러한 패턴은 3대에 걸쳐 반복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위협을 복합 비대칭 포트폴리오로 재인식할 것을 제안하며, 대응 방안으로 동태적 기술상쇄, 비용 부과 전략을 통한 유지 비용 압박, 한국형 CMMC 제도의 조기 구축 등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도출했다.

핵심어

레짐 생존, 군사력 포트폴리오, 방산 안보, 동태적 기술 상쇄, 비용 부과 전략

차례

1. 서론
2. 김일성·김정일 정권의 군사력 포트폴리오 형성과 변화
3. 김정은 시기: 핵무력 완성, 북한 비대칭 포트폴리오의 3단계 진화
4.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 관점에서의 함의
5. 방산안보 관점에서의 시사점
6. 결론

Open Access

접수일: 2026년 7월 03일
수정일: 2026년 7월 20일
게재승인일: 2026년 7월 20일
출판일: 2026년 9월 30일

Copyright © 2026 Author(s).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CC BY 4.0 license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Original Article

A Military Transformation in North Korea and Implications for Defense Industrial Security

Jinyoung Park

Major General (Retired), Republic of Korea Army

Corresponding Author: Jinyoung Park (pjyrocka@naver.com)

ABSTRACT

This study applies a structural and neoclassical realist composite framework to examine how North Korea has advanced its military portfolio despite severe isolation and economic constraints. The findings reveal that North Korea's military evolution reflects bounded strategic rationality, where international structural pressures are filtered through leaders' cognitive filters and domestic elite dynamics. While external structures determine macro trends, domestic variables drive the pursuit of an offensive portfolio. Although optimized for short-term regime survival, this choice traps the regime in long-term economic erosion and security dilemmas. Consequently, the study advocates a defense paradigm shift, redefining the threat as a "complex asymmetric portfolio." To counter this, it proposes actionable strategies: pursuing dynamic technology offsets, applying cost-imposition strategies, and swiftly establishing a Korean Cybersecurity Maturity Model Certification (CMMC) framework.

KEYWORDS

Regime Survival, Military Portfolio, Defense Industrial Security, Dynamic Technological Offset, Cost-Imposition Strategy

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북한은 1948년 정권 수립 이래 70여 년간 세 차례의 권력 세습을 거치면서도 체제를 유지해 온 사실상 유일한 사회주의 정권이다. 냉전 종식과 동구권 붕괴,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세 차례의 핵 위기¹⁾, 그리고 유엔 안보리의 포괄적 제재라는 연속적 생존 위기 속에서도 북한 레짐이 존속한 것은 국제정치학 관점에서 예외적 사례로 간주되어 왔다. 이러한 예외성은 북한 레짐이 외부의 구조적 압력과 내부의 정치적 동학에 동시에 대응하면서 군사력을 전략적으로 구성·운용해 온 결과라는 점에서 체계적인 분석을 요구한다.[1]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북한의 군사적 행동을 비합리적 위협으로 파악하거나 핵·미사일 등 단일 무기 체계 또는 핵실험·도발 등 특정 사건에 집중함으로써 세 정권을 관통하는 구조적 논리를 포착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북한의 군사력 변화를 3대 정권에 걸쳐 통시적으로 비교 분석하고 국제환경 변화에 따른 군사력의 변화 동인과 과정을 추적하여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김정은 시대의 군사력 변화를 예측함으로써 방산안보 관점에서의 우리 대응 방향을 도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 구체적으로 구조적 현실주의와 신고전적 현실주의의 결합을 이론적 기반으로 하여 북한 3대 정권의 레짐 생존전략과 연계된 군사력 포트폴리오 변화를 다음의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국제구조 → 지도자 위협인식·엘리트 연합 → 군사력 포트폴리오’라는 분석 경로를 체계화하고 둘째, 군사력 포트폴리오 개념을 도입하여²⁾ 단일 자산군 중심의 분석을 넘어 복수의 군사 자산군이 결합·재배분되는 동학을 통합적으로 설명하며, 셋째 이를 통해 김정은의 북한이 어떠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지 방향성을 예측하고 방산안보 관점에서의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2]

1.2. 이론적 배경 및 분석 틀

이론적 배경 및 분석 틀 설정에 앞서 북한의 무력 증강을 바라보는 근본 전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군사력 고도화를 구조적 프레임워크로만 분석할 경우, 자칫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 행보를 안보 딜레마와 같은 방어적 명분으로 포장하여, 정권의 무력 증강에 당위성이나 면죄부를 부여하는 한계를 지닐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무력 증강은 노동당 규약에 명시된 적화통일 야욕과 「국가 핵 무력 정책에 관한 법령」(2022년, 이하 핵 무력 정책 법)에 규정된 ‘핵 무력 선제 사용’ 등 체제 고유의 공격적, 호전적 목표를 근거에 두고 입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이러한 체제 본질적 위협을 명확히 인식한 바탕 위에서,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은 국제체제의 구조적 제약과 국내적 정치 역학을 통합적으로 고찰하기 위해 구조적 현실주의와 신고전적 현실주의를 결합한 분석 모델을 상정한다. 세부 분석 틀은 다음의 그림 1과 같으며, 이는 단순히 북한의 외교 행위나 안보 정책을 설명하는 것을 넘어 북한이 구축해 온 구체적인 군사력 포트폴리오의 변화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다층적 접근을 의미한다.

1) 1차 위기(1993년~94년)가 냉전 붕괴 후 생존 탐색이었다면, 2차 위기(2002년~07년)는 핵 해정을 통한 실질적 역량 확보 시기였으며, 3차 위기(2013년~17년)는 국제체제의 압력에 맞서 비대칭 우위를 법제화하고 공세적 포트폴리오를 완성한 시기로 정의할 수 있다.

2) 본 연구에서 차용한 포트폴리오 개념은 해리 마코비츠(Harry Markowitz)가 1952년에 제시한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Modern Portfolio Theory)의 핵심 논리, 즉 자산 분산을 통한 리스크 최소화 및 기대 수익의 최적화를 국가 안보 및 군사 전략 차원으로 확장·재해석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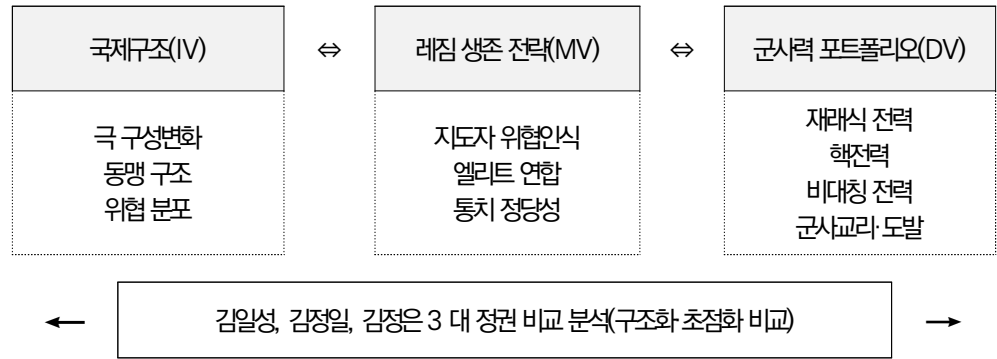


그림 1. 분석 틀의 구성

이를 위한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은 김일성·김정일 정권의 군사력 포트폴리오 형성과 전환 과정을 분석하고 3장은 핵심 분석 대상인 김정은 정권을 3단계 진화 모형으로 심층 분석한다. 4장은 현실주의 분석 틀의 이론적 함의를 도출하고, 5장은 방산안보 관점에서의 시사점과 대응 방향을 제시한다.

2. 김일성·김정일 정권의 군사력 포트폴리오 형성과 변화

2.1. 김일성 정권(1948~1994): 재래식 대군과 혁명 레짐

김일성 정권 시기의 국제구조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냉전 양극체제가 형성되었으며, 당시 북한의 군사력 포트폴리오 형성은 두 가지 외생 충격에서 출발한다. 첫째, 1946~1950년 소련의 일괄 군사지원 패키지, 즉 정권 설립 초기부터 6·25전쟁 직전까지 T-34 전차 약 150~200대, 항공기 약 110~180대, 포 수백여 문 등 장비와 함께 군수 공장 설비 및 기술 고문단을 포함한 초기 포트폴리오의 외생적 기반을 형성하였다.[3] 둘째,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된 6·25전쟁의 총력전 경험은 북한 내부적으로도 재개전이 가능한 분단 체제라는 상황 인식을 각인시켰다. 1953년 27만 5천 명이던 북한군 병력이 1955년 45만 명으로 증가하였고, 1959년 40만 명의 노동적위대가 창설되어 전인민 무장 체계가 구축되었다. 이 기반 위에서 1962년 4대 군사노선이 제도화되었다. 즉, 군사력 측면에서 김일성의 극단적인 대남 위협인식과 무력 통일 야욕은 ‘4대 군사노선’을 통해 국가 자원을 총동원한 압도적인 재래식 대군 건설로 이어졌다.[4]

신고전적 현실주의의 관점에서 쿠바 미사일 위기(1962)는 김일성의 동맹 불신을 확정짓는 결정적 학습 사건이었다. 소련의 핵미사일 철수 결정이 ‘동맹은 결정적 순간에 배신한다’는 위협인식으로 과잉 일반화되면서 자력갱생과 내적 균형 최대화라는 전략 선호가 강화되었다. 항일 빨치산, 혁명 1세대 및 인민군 지도부로 구성된 혁명 연합은 이 재래식 대군 포트폴리오의 핵심 수혜 집단이었고 성분제와 당·군·보위기관 삼각 구조를 통해 제도적으로 재생산되었다. 그러나 이 포트폴리오는 소련 후견 소멸 시 자원 기반이 붕괴되는 구조적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2.2. 김정일 시기(1994~2011): 선군정치와 핵 헤징

김정일이 실질 권력을 장악한 1990년대는 세 가지 구조 충격이 중첩된 위기 환경이었다. 소련 붕괴로 외적 균형 자원이 소멸하였고,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으로 경제·사회 기반이 무너졌으며, 걸프전과 이라크전에서 미군의 정밀 타격이 후세인 정권을 참수하는 과정이 ‘비핵 정권은 전복된다’는 위협 인식을 각인시켰다. 이 삼중 충격이 선군정치, 비대칭전력의 강화, 핵 헤징 포트폴리

오를 구조적으로 강제하였다.

선군정치는 표면적으로 군을 전면에 내세우고 핵심 지지 연합으로 격상시킨 형태를 띠었으나 당시 극심했던 경제난, 식량난(고난의 행군), 에너지난 등을 타개하기 위해 군이 보유한 조직력과 자원을 정권 재건에 동원하기 위한 선전적·실용적 조치라는 성격이 강했다. 즉, 국방위원회를 중심으로 군이 부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의 군대라는 관점에서 북한의 근본적인 당 우위의 지배구조 원칙은 김일성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게 일관되게 유지되었다. 이러한 변함없는 제도적 환경 속에서 선군정치는 쿠데타·붕괴 위협을 동시에 관리하고 체제 위기를 돌파하는 복합 통치 전략이었다.[5]

핵 카드는 토마스 셸링(Thomas Schelling)의 강압전략 논리에 따라 에너지와 경제 지원을 협상으로 이끌어내는 레버리지로 기능하였다. 1994년의 제네바 기본합의에서 경수로 2기와 연간 중유 50만 톤을 획득하고 2005년 9월 19일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에서 에너지 지원을 약속받은 것이 이 전략의 단기 성과였다.[6] 그러나 반복된 1, 2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2006년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2009년 1874호의 제재 누적을 초래하면서 전략적 자해 구조가 형성되었으며, 이 시기 조성된 국방위원회 중심의 선군연합은 핵·군수 자원 배분의 주요 수혜자로 편입되면서 포트폴리오의 경로 의존성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3. 김정은 시기: 핵무력 완성, 복합 비대칭 포트폴리오의 3단계 진화

3.1. 국제구조와 위협환경

김정은 정권 집권 시기의 국제구조는 크게 세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첫째, 2016~2017년에 채택된 일련의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제2270호~제2397호)로 인해 북한의 전체 수출 중 약 90% 상당에 달하는 주요 품목이 차단되었다. 이 제재 심화는 북한으로 하여금 제재를 단기 압박 수단이 아닌 장기 구조 상수로 내재화하게 만든 결정적 계기였다. 둘째, 미·중 전략 경쟁의 심화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공조를 구조적으로 약화시켰다. 2022년 러시아와 중국의 추가 제재안 거부권 행사는 제재 레짐의 실효성 상한을 드러내면서 포트폴리오 고도화의 구조적 기회로 기능하였다. 셋째,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김정은에게 21세기 하이브리드전의 실전 학습장을 제공하였다. 드론·전자전·사이버의 전장 지배력과 전술핵 위협의 역지 효과를 실전으로 관찰 및 경험한 것이 3단계 포트폴리오의 비대칭 다각화, 현대화를 가속하는 구조적 자극이 되었다.

3.2. 레짐 생존 전략

김정은의 레짐 생존 전략은 탈냉전기 김정일의 선군정치와 구별되는 복합 정통성 구조를 구축하였다. 김정은의 생존 전략은 군부에게는 핵무기를 통한 강성대국의 자부심을, 돈주들에게는 시장화를 통한 경제적 실익을, 일반 주민들에게는 건설 사업을 통한 발전하는 국가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사회 각 계층의 요구에 맞춰 정권의 정당성을 동시에 전파하는 다각적인 통치 기제라 할 수 있다.

엘리트 연합은 선군연합에서 핵·전략군·사이버·돈주 등을 포함하는 복합 연합으로 확장되었다. 집권 첫 해 현지도 시 최다 동행자(50여 회)이자 고모부였던 장성택을 2013년 12월 처형한 것은 이 재편의 충격파였다. 이 사건은 혈연·공적보다 충성 가능성과 위협성 제거를 우선하는 엘리트 통제 원칙을 레짐 전체에 각인시켰다. 반면 핵·우주 성과에 기여한 과학기술 엘리트에 대한 아파트 무상 분양·포상 체계는 핵 포트폴리오 유지에 직접 이해관계를 갖는 새로운 지지층을 형성하였다.

3.3. 포트폴리오의 3단계 진화

김정은 정권의 군사력 포트폴리오는 집권 이후 현재까지 크게 세 단계의 진화 경로를 거치며 고도화되었다.

제1단계(2011~2015년)는 ‘선군 유산 계승과 핵 무력 가속화’의 시기이다. 김정은은 집권 불과 3개월 만에 전략 로켓 사령부를 시찰하고, 첫 열병식에서 신형 ICBM TEL을 공개하며 핵·미사일 전력에 대한 최고사령관의 직접적 통제 의지를 대내외에 과시했다. 나아가 2013년 제3차 핵실험과 핵·경제 병진노선의 공식 선언, 그리고 전략로켓군의 전략군 재편(2012~2014년)을 통해 새로운 군사력 포트폴리오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였다.

제2단계(2016~2020년)는 소위 ‘국가 핵 무력의 완성’ 시기이다. 북한은 2016년 제4·5차 핵실험과 2017년 제6차 수소탄 시험, 그리고 화성-14·15형 ICBM 시험발사를 연이어 단행하며 대미 전략 타격 및 억지력 확보에 주력하였다. 이와 동시에 KN-23·24·25 등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중심의 전술핵 투발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전략적 타격 능력과 함께 전술적 타격 능력을 아우르는 이중 공격 및 억지 구조 완성에 주력하였다.

제3단계(2021년~현재)는 다영역 복합 비대칭 포트폴리오의 실전화 및 전방위 확산 시기이다. 2021년 제8차 당대회에서 명시된 6대 국방 과업(핵탄두 소형화, 초대형 수소탄, 핵잠수함, 극초음속 무기, 고체연료 ICBM, 군사정찰위성)은 제3기 포트폴리오로 진입하기 위한 공식 청사진으로 작용했다. 2022년 9월 「핵 무력 정책법」의 제정은 이 3단계 포트폴리오의 교리적 완성을 의미한다.³⁾ 이 법의 핵심은 두 가지이다. 첫째, 5가지 핵 선제사용 조건을 법제화하였는데, 특히 재래식 전쟁 확전, 장기화 방지를 위한 작전 수행 조항은 재래식 전쟁 국면에서도 전술핵 사용이 가능함을 명문화하였다. 이는 비핀 나랑(Vipin Narang)이 분류하는 비대칭 고조형 핵전략에 전쟁수행형 요소가 혼합된 복합 혼합형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7] 둘째, 핵 능력의 불포기와 협상 불가를 법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비핵화 협상 공간 자체를 제도적으로 봉쇄하였다.

아울러 2022년 한 해에만 수십여 차례의 전례 없는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같은 해 12월의 소형 무인기 영공 침범과 연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사이버 활동을 통한 외화 조달을 제도화하였다. 또한 사거리 15,000km 이상의 화성-17형 및 고체연료 기반의 화성-18형 ICBM 능력을 고도화하는 한편, 2024년에는 1만 명 이상의 병력을 러시아에 파병하는 등 군사적 외연을 극단적으로 확장했다. 특히 2024년 6월 체결된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은 방공망, 극초음속 무기, 정찰위성, 핵잠수함 등 첨단 군사기술의 이전 가능성을 제도화하며 북한의 비대칭 위협을 새로운 차원으로 진화시키고 있다. 아울러 제9차 당 대회에서는 핵 및 상용무력 병진정책 공식화를 통해 핵 우위를 토대로 대남 재래식 전력 열세도 극복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3)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2022년 9월 8일 제14기 제7차 회의에서 채택한 「국가핵무력정책에 관한 법령」에서 5가지 핵 선제사용 조건을 제시하였다. 즉, ① 핵·WMD 공격 임박, ② 국가 지도부·핵전력 타격 임박, ③ 국가 기반시설 치명적 공격, ④ 재래식 전쟁 확전·장기화 방지, ⑤ 최고 지도부 승인이다.

3.4. 북한 3대 정권 군사력 포트폴리오 비교

표 1. 3대 정권 군사력 포트폴리오 비교

구 분	김일성(1948~1994)	김정일(1994~2011)	김정은(2011~현재)
국제구조(IV)	냉전 양극, 소련 후견	미국 단극, 후견 소멸	미·중 경쟁, 포괄 제재
결정적 학습 사건(MV①)	쿠바 위기→동맹 불신	이라크전→비핵=전복	하노이 결렬→협상 불가
이념 필터(MV②)	4대 군사노선, 주체 사상, 무력 통일	선군정치	핵·경제 병진 노선, 적대적 두국가
엘리트 연합(MV③)	혁명 연합(항일유격대·인민군)	선군 연합(군·보위 중심)	복합 연합(핵·사이버·돈주 등)
포트폴리오(DV)	재래식 대군	핵 해징+비대칭 초기	핵무력 완성+복합 비대칭
핵심 딜레마	후견 소멸 시 자원 기반 붕괴	제재 누적, 전략적 자해	법적 고착화, 비핵화 봉쇄

북한 3대 정권 군사력 포트폴리오 비교 분석은 군사력 포트폴리오가 국제구조 변화와 지도자 인식·엘리트 구조의 상호작용의 함수로 3대 정권에 걸쳐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각 정권의 구조·행위자·이데올로기 조건의 차이가 상이한 포트폴리오를 낳았다는 것은 분석 틀이 단순한 사후 합리화가 아니라 비교 예측력을 갖는 도구임을 가능하게 한다.

앞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3대 정권의 군사력 포트폴리오 변화는 단순한 무기체계의 양적 증감이나 도발의 나열이 아니다. 체제의 근본적 목표인 대남 적화 통일 기조 아래에서 김일성 시기의 재래식 집중형(양적 팽창), 김정일 시기의 비대칭 생존형(핵 해징 집중)을 거쳐 김정은 시기의 다영역 복합 비대칭 고도화형으로 이행한 과정은 북한이 외부 위협과 내부 추출 능력의 한계 속에서 대남 공세적 레짐 생존을 위해 안보 자산 배분 구조를 끊임없이 진화시켜 온 ‘복합 포트폴리오형 군사력 건설’의 완성이자 비가역적 고착화의 결과물로 해석된다.

4.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 관점에서의 함의

4.1. 구조적 현실주의의 설명력과 한계

케네스 왈츠(Kenneth Waltz)로 대표되는 구조적 현실주의의 이론은 무정부적 국제 체제에서 국가가 생존을 위해 어떻게 자조(Self-help)의 원칙에 따라 안보 전략을 수정하는지를 훌륭하게 설명한다. 이 관점을 북한에 적용할 경우 국제구조의 변동이 북한 3대 정권의 군사 포트폴리오 전환 방향성을 일관되게 강제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8]

구체적으로 냉전기 양극 체제하에서 김일성 정권이 중·소의 우산(외적 균형) 아래 재래식 대군을 유지한 것, 탈냉전기 후견국의 상실이라는 구조적 충격 속에서 김정일 정권이 핵과 미사일이라는 비대칭 전력(내적 균형)으로 중심축을 이동한 것, 그리고 미·중 전략 경쟁과 포괄적 대북제재의 고착화 속에서 김정은 정권이 핵무력 완성으로 치달은 일련의 궤적은 대남 인질을 기반으로 체제 생존을 도모하기 위한 구조적 합리성의 결과이다. 즉, 구조이론은 북한 군사 포트폴리오의 거시적 진화 방향, 즉 외적 균형에서 내적 균형으로의 이동을 규명하는 데 강력하고 일관된 설명력을 제공한다.

그러나 국제구조의 체계적 압력은 국가가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의 넓은 경계를 설정할 뿐, 그 경계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자원 배분과 교리의 선택까지 지시하지는 못한다. 이를 국제정치학에서는 구조이론의 과소결정 문제라고 부른다. 북한의 극심한 경제난이라는 제약 조건을 고려할

때 합리적 국가라면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높은 최소 억지 수준에서 핵 능력을 동결하고 잉여 자원을 민수 경제에 투입했어야 한다. 하지만 구조이론의 예측 모델은 다음 세 가지 핵심적인 북한의 전략적 일탈에 대해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한다.[9]

첫째, 왜 최소 억지가 아닌 최대 억지를 추구하는가? 북한은 생존을 위한 방어적 억지 수준을 넘어 천문학적 비용이 소모되는 수소폭탄, 고체연료 ICBM, 그리고 남한을 겨냥한 다종의 전술핵무기를 결합한 매우 공격적이고 과잉된 형태의 최대 핵전력을 구축하였다.

둘째, 왜 기형적인 복합 비대칭 및 하이브리드 수단을 포트폴리오에 통합하였는가? 구조적 압력만으로는 북한이 왜 핵무력 고도화에 머물지 않고, 사이버 해킹이나 대규모 러시아 파병처럼 경제적 이익과 군사기술 확보를 동시에 노리는 비전통적 수단들까지 하나의 군사력 포트폴리오로 결합하여 운용하는지 그 미시적 동기를 설명하기 어렵다.⁴⁾

셋째, 왜 외교적 유연성을 파괴하면서까지 핵무력을 법적으로 비가역화하였는가? 2022년 「핵무력 정책법」 채택을 통해 스스로 비핵화 협상의 여지를 없애고 선제타격 가능성을 명문화한 것은 강대국 사이에서 유연한 세력균형을 추구해야 할 약소국의 일반적인 외교·안보 행태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러한 구조적 현실주의의 설명적 간극은 체제의 블랙박스를 열어 국내적 요인을 분석 틀에 포함시켜야만 메워질 수 있다. 즉, 북한이 구조적 합리성을 초과하는 극단적 선택을 반복하는 이유는 국제구조가 발신하는 위협 신호가 북한 지도부의 역사적 트라우마와 과잉 위협인식이라는 심리적 렌즈를 통과하고 레짐 유지를 위한 핵심 엘리트 연합 포섭이라는 국내 통치 메커니즘을 거치면서 굴절·변역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이 과소결정의 문제는 거시적 체제 압력(독립 변수)과 북한 고유의 특수한 매개변수(지도자 인식, 엘리트 구조)를 결합하여 분석하는 신고전적 현실주의적 접근이 본 연구에 반드시 도입되어야 하는 이론적 당위성과 실증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한다.

4.2. 신고전적 현실주의의 매개변수의 경험적 검증

본 연구에서 분석한 세 시기의 매개변수들은 북한의 군사적 행태가 단순히 외부 위협에 대한 기계적 반응이 아님을 경험적으로 입증한다. 첫 번째 매개변수인 지도자의 위협 인식 차원에서 북한 수뇌부는 국제구조의 변동을 각자의 결정적 학습 경험에 비추어 과잉 일반화하는 일관된 패턴을 보였다. 김일성은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를 목격하며 후견국(소련)의 동맹 공약이 위기 시 철회될 수 있다는 동맹 불신을 내재화하였고, 이는 4대 군사노선을 통한 철저한 자립적 내적 동원으로 이어졌다. 김정일은 2003년 이라크 전쟁을 관찰하며 핵 없는 국가의 운명이 레짐 붕괴로 직결됨을 확신하였고, 김정은은 2011년 리비아의 몰락과 2019년 하노이 회담의 결렬을 거치며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자체를 전략적 손실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3대에 걸친 심리적 기제는 국제구조가 제공하는 협력의 기회를 상쇄하고, 오직 물리적 비대칭 전력만이 유일한 생존 담보라는 확증 편향적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했다.[10] 아울러 최근 미국에 의한 베네수엘라의 마두로와 이란의 하메네이 제거 등을 통해 자신의 판단에 확신을 가지고 공세적 생존전략을 강화할 것이다.

두 번째 매개변수인 이념 필터는 구조적 압박을 북한식 군사 전략으로 변환하는 이념적 허가 기능을 수행하였다. 북한의 통치 이념은 단순한 레토릭을 넘어 구조적 환경이 요구하는 합리적 최소 억지의 수준을 초과하는 공세적 포트폴리오를 정당화하는 논리적 기반이 되었다. 김일성 시기의 4대 군사노선은 전 사회를 병영체제화하는 정당성을 부여하였으며, 김정일 시기의 선군정치는 경제적 파탄 속에서도 군에 자원을 최우선 배분하는 기형적 구조를 신성시하였다. 나아가 김정은 시기

4) 북한은 정권 생존전략 측면에서 사이버 부대가 금융기관 해킹 등을 통해 돈을 훔쳐 오듯 특수부대도 몸으로 돈과 기술을 벌어오는 하이브리드 생존 자산으로 전략시켰다.

의 ‘핵-경제 병진노선’은 핵무력이 단순히 방어용이 아니라 경제 발전의 물적 기반이자 민족적 자부심의 상징이라는 법적·이념적 비가역화를 단행하는 논리적 도구가 되었다. 이러한 이념적 여과장치는 북한이 외부 세계와 타협할 수 있는 정책적 유연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구속력을 발휘하였다.

세 번째 매개변수인 엘리트 연합은 군사 포트폴리오와 지배 연합의 이해관계를 유기적으로 결합함으로써 비핵화를 내생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강력한 경로 의존성을 형성하였다. 김일성 시기 항일 빨치산 중심의 혁명연합은 재래식 정규군 확장을 통해 세력을 공고히 하였으며, 김정일 시기 고난의 행군을 지탱한 선군연합은 핵과 미사일 개발 과정에서 특권을 누리는 군부 및 군수 관료 집단을 탄생시켰다. 김정은 시기의 복합 연합은 핵·미사일 기술 관료뿐만 아니라 사이버·IT 및 대외 무역 엘리트까지 포섭하여 군사 포트폴리오의 생존력을 다변화하였다. 특정 군사 전략이 엘리트의 기득권과 결합되는 이 메커니즘은 포트폴리오의 수정이 곧 지배 연합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공포를 넣음으로써 체제가 구조적 유인에도 불구하고 핵을 포기할 수 없는 전략적 고착 상태를 초래하였다.[11]

4.3. 복합 포트폴리오형 레짐 생존 모형의 학문적 의의

본 논문이 북한 3대 정권의 군사력 진화 과정을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제안하는 복합 포트폴리오형 레짐 생존 모형은 기존 안보 및 북한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는 세 가지 이론적 기여를 갖는다.

첫째, 구조적 압력과 매개변수 간의 상호작용이 낳는 전략적 왜곡과 과잉 균형 현상을 실증하였다. 기존의 구조적 현실주의는 안보 위협에 직면한 국가가 세력 균형을 추구한다고 가정하지만, 연구 결과 구조이론이 예측하는 합리적 균형 행동이 실제 포트폴리오로 출력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권 내부 매개변수(지도자의 위협 인식, 이념 필터, 엘리트 연합)를 거쳐야 함을 입증했다. 특히 이 매개변수들은 체제의 압력을 단순히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때로는 구조이론의 예측을 역방향으로 왜곡하여 최소 억지를 초과하는 극단적 방향으로 증폭시킨다는 점을 규명하였다. 경제적 파탄 속에서도 최대 핵전력을 구축하려는 북한의 이례적 행태는 객관적 안보 위협이 지도자의 트라우마적 인식을 통과하며 발생한 과잉 균형의 결과임을 본 모형은 논리적으로 설명해 낸다.

둘째, 군사 포트폴리오를 단순한 대외 안보 수단이 아닌 다목적 통치 정치 경제학적 도구로 재개념화하여 북한 군사전략의 통합 논리를 보완하였다. 즉, 전통적 안보 연구가 무기체계를 외부의 적을 억지하기 위한 도구로만 파악했다면, 본 모형은 북한의 군사 포트폴리오가 외부 위협에 대한 억지력 제공, 핵심 군부 및 과학기술 엘리트에 대한 특권과 자원의 포상, 대중을 향한 체제 결속 및 시각화된 정당성 부여, 그리고 사이버 해킹 및 러시아 파병을 통한 외화 조달(유동성 확보)이라는 네 가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복합 기능체임을 규명했다. 이는 북한이 왜 재래식 무기, 첨단 비대칭 무기(핵), 그리고 하이브리드 수단(사이버·전자전 등)을 기형적으로 융합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하는 내부 논리를 제공한다.

셋째, ‘단기 생존 최적화-장기 비용 누적’이라는 구조적 함정의 규명을 통해 김정은 정권의 비핵화가 내생적으로 불가해지는 경로 의존성을 설명하였다. 북한 레짐은 특정 시기마다 직면한 생존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포트폴리오를 단기적으로 최적화하여 왔다. 그러나 고도화된 무기체계 도입과 엘리트층에 대한 보상 등 당시로서는 합리적이었던 선택들이 누적되면서, 결과적으로는 가혹한 국제 제재의 고착화와 만성적 자원 고갈이라는 구조적 비용을 초래했다. 이미 형성된 엘리트 연합의 기득권과 군사적 자산은 체제를 기존 노선에 강력히 고착시켰고, 이로 인해 비핵화라는 대안적 경로로의 전환은 원천적으로 어려워졌다. 최근 들어 북한의 일관된 비핵화 불가 입장 표명은 협상력 제고용 카드일 뿐만 아니라 이처럼 기존 경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방증하는

결과를 의미한다.[12]

5. 방산안보 관점에서의 시사점

5.1. 입체적 대북 위협 인식으로의 전환

방산안보 전략 수립의 본질적인 전제는 입체적인 대북 위협인식으로의 전환이다. 북한의 위협은 단일 자산군의 고도화가 아닌, 미 본토를 겨냥한 전략핵, 한반도 남부를 타격하는 전술핵, 자금 조달 및 신경망 마비를 노리는 사이버 역량, 저비용 드론·전자전·특수전이 정교하게 융합된 복합체계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 복합체계의 핵심은 각 군사 수단이 상호 보완하며 시너지를 창출하는 포트폴리오 효과에 있다. 사이버 부대의 외화 조달은 제재를 우회해 핵·미사일 R&D 자금을 대는 파이프라인 역할을 하며, 저비용 드론과 전자전은 회색지대 도발로 한미 연합 자산의 피로도를 높이고 전술핵 활용 공간을 확보하는 기만전술로 기능한다. 즉, 북한의 무기체계는 상호 의존적인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복합 하이브리드 위협 양상은 한국의 국방력 건설과 방위산업 기획 패러다임에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한다. 현재 한국의 핵심 방어 기제인 한국형 3축 체계(킬체인·KAMD·KMPR)는 주로 발사체 중심의 물리적 타격과 대칭적 방어에 집중된 단선적 대응의 성격이 강하다. 3축 체계는 명확한 징후가 표출되는 탄도미사일 위협에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사이버 침투나 다중 드론 공격, 전자전 교란이 핵 위협과 결합되어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될 경우 그 대응의 한계를 노출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국의 방산안보 전략은 개별 플랫폼 중심의 요격 및 보복 체계에서 탈피하여, 북한의 복합 비대칭 위협 전체를 무력화할 수 있는 비대칭 대응 포트폴리오로 진화해야 한다. 이는 미사일 발사 전 지휘통제망을 사이버·전자전으로 마비시키는 발사 전 교란(Left of Launch) 등의 비물리적 타격 역량을 기존 3축 체계에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우주, 사이버, 전자, 지상, 해상, 공중을 하나로 연결하는 다영역 작전(Multi-Domain Operations) 환경에 발맞춰 방산 R&D 투자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군사 자산이 하나의 유기체처럼 작동하는 통합 복합체계(System of Systems)를 완성해야 한다.

5.2. 동태적 기술상쇄로 속도의 안보 보장

연구 결과로 도출된 복합 포트폴리오형 레짐 생존 모형은 북한의 군사적 선택이 고착된 상태가 아니라 국제구조의 압박과 내부 엘리트 연합의 이해관계에 따라 끊임없이 재조합되는 동태적 과정을 입증하고 있다. 북한은 재래식 전력의 열세를 극복하고 레짐 생존을 보장받기 위해 핵·미사일을 상수로 하여 사이버, 전자전, 무인기 등 저비용·고효율의 비대칭 노드를 포트폴리오에 지속적으로 편입시키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가변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안보 전략은 단순히 개별 무기체계를 도입하는 수동적 차원을 넘어 국가 방위산업의 근본적인 R&D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의 압도적 방산 기술 우위를 기반으로 상대의 위협 효용을 상시적·지속적으로 제로화하는 동태적 기술 상쇄 전략을 제안한다.

동태적 기술 상쇄란 북한이 새로운 비대칭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편입시키거나 기존 자산을 고도화할 때마다 우리의 진화된 방산 R&D 역량을 즉각적으로 투사하여 그 전략적 가치를 원천적으로 무력화하는 기술적·산업적 기제로서의 속도의 안보를 의미한다. 이는 북한 지도부가 투입한 막대한 국가적 자원이 실제 안보 수익으로 전환되지 못하게 차단함으로써 그들의 전략적 투자를 즉각적인 매몰 비용으로 전락시키는 고도의 비용 부과 메커니즘을 내포한다. 즉, 우리가 추구하는 상쇄

는 단순히 물리적 파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 우위를 통해 북한의 군사적 선택이 지닌 경제적·전략적 합리성을 해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R&D 혁신 방안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동태적 기술 상쇄 전략의 4대 핵심 축 및 실행 과제

핵심 전략 축	주요 실행 과제	기대 효과
시간적 상쇄	신속 획득 체계 상시화, 디지털 트윈 기반 R&D	북한의 기술 배치 주기보다 빠른 대응 전력화
경제적 상쇄	레이저, 고출력 마이크로파, 전자전 등 지향성 에너지 무기	발당 비용 혁신을 통한 적의 비용 부담 극대화
기술적 상쇄	보안에 의한 설계, 방산방첩	상쇄 기술의 안보 유효기간 연장 및 우위 유지
개방형 혁신	민간 첨단기술의 스핀 온, 생태계 통합	예측 불가능한 경로의 기술적 기습 역량 확보

동태적 기술 상쇄는 한국의 방위산업이 단순히 무기체계를 생산하는 공급자를 넘어 국가 안보 전략의 핵심적인 상쇄 도구이자 북한의 레짐 생존 방정식에 혼란을 주는 결정적 변수로서 기능해야 함을 의미한다. 북한의 위협이 고정되어 있지 않듯 우리의 대응 또한 고정될 수 없으며, 끊임없는 기술적 혁신과 속도의 우위를 통해 상대의 전략적 계산을 무력화해야 한다. 향후 한국의 국방 중기 계획과 방위력 개선 사업은 이러한 동태적 상쇄의 관점에서 재설계되어야 한다. 고가의 대형 플랫폼 위주 대응에서 탈피하여 적의 위협을 지능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비대칭 대응력, AI 기반의 자동화된 결심 지원 체계, 그리고 물리적·비물리적 타격 수단의 복합적 운용 능력에 자원을 우선 배분해야 한다. 이러한 R&D 패러다임의 혁신만이 북한이라는 복합 포트폴리오형 레짐이 던지는 안보적 도전을 근본적으로 상쇄하고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안보 평형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5.3. 비용 부과 전략: 포트폴리오 유지 비용의 구조적 증대

앞서 규명한 바와 같이 북한의 군사 포트폴리오는 ‘단기 생존 최적화-장기 비용 누적’이라는 거대한 구조적 함정 위에 놓여 있다. 특히 최고지도자가 체제 유지를 위해 육성한 핵·군수 사이버 엘리트 집단의 물질적 기득권은 그 자체로 비핵화를 가로막는 강력한 내생적 구조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방산안보 및 대북 전략은 단순히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억지하는 수동적인 현상 유지를 넘어 북한 수뇌부가 현재의 기형적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는 데 따르는 경제적·전략적 부담을 체제가 감내할 수 없는 임계점까지 끌어올리는 비용 부과 전략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13] 이 전략은 북한의 복합 포트폴리오를 지탱하는 자금줄, 군사 인프라, 그리고 대외적 우회로를 동시에 옥죄는 세 가지 핵심 축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첫째, 사이버 금융 범죄 및 불법 자금망 차단을 통한 유동성 고갈이다. 김정은 정권의 비대칭 무기 고도화와 충성스러운 엘리트 연합에 대한 물질적 보상은 암호화폐 탈취와 불법 IT 노동자 파견을 통해 획득하는 막대한 사이버 불법 수익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 공조 및 국제 금융 네트워크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 사이버 해킹 조직의 자금 세탁 경로를 전자적·제도적으로 완벽히 차단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제재 이행을 넘어 포트폴리오 유지에 필수적인 생명줄을 끊어냄으로써 북한 내부 지배 연합의 파이를 축소시키고 엘리트 간 자원 분배를 둘러싼 균열을 유도하는 가장 직접적인 타격 수단이 된다.

둘째, 압도적인 첨단 정밀 타격 역량 확충을 통한 북한 전략 자산의 취약성 강제이다. 한국은 초정밀·고위력 타격 미사일, 스텔스 항공 자산, 무인기 군집 타격 역량 등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북한의 값비싼 핵·미사일 기지와 지휘부 시설이 개전 초기에 완전히 파괴될 수 있다는 확실한 공포

를 주입해야 한다. 북한이 천문학적인 비용과 자원을 투입해 개발한 비대칭 전력의 생존성이 한국의 월등한 방산 역량 앞에 무력화된다면, 수십 년 동안 구축해온 반항공 체계에 비하여 미사일 방어 체계가 매우 취약한 북한은 이를 방어하고 은닉하기 위해(예: 지하 갱도 심층화, 요새화 시설 증축, 이동식 발사대 추가 생산 등) 더 많은 희소 자원을 소모해야만 하는 출혈 경쟁의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셋째, 한·미·일 안보 협력의 제도화를 통한 포괄 제재 레짐의 실효성 복원이다. 최근 가속화되는 북·러 군사 밀착과 대규모 파병은 대북 제재의 빈틈을 뚫고 첨단 군사 기술과 자본을 확보하려는 북한 포트폴리오의 절박한 연명 전략이다. 이에 대응하여 한국은 한·미·일 다영역 연합 방위 체계를 제도화하고, 북한으로 유입되는 민간겸용기술의 공급망을 원천 차단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등의 촘촘한 그물망을 재구축하여 외부로부터의 자원 수혈을 막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한국이 주도하는 비용 부과 전략의 궁극적 목표는 단순한 군사적 우위 달성이 아니다. 북한의 군사 포트폴리오 유지 비용이 그로 인해 얻는 안보적·정치적 편익을 압도하도록 구조적 환경을 재설계함으로써 북한 지도부와 핵심 엘리트 스스로가 현재의 공세적 군사 포트폴리오가 체제 생존의 자산이 아니라 치명적인 부채임을 자각하고 비핵화라는 전략적 궤도 수정으로 내몰리게 만드는 것에 있다.

5.4. 방산 투자 우선순위의 재설정

북한이 재래식 무기, 핵·미사일, 그리고 하이브리드 수단을 결합한 복합 비대칭 포트폴리오를 구축함에 따라, 한국의 방위산업 투자 우선순위 역시 북한의 위협 변화 속도 및 군사력 강화 템포에 맞추어 과거의 중후장대형 플랫폼 중심에서 벗어나 다영역 작전 기반의 네트워크 중심 전력으로 신속히 재편되어야 한다. 북한의 위협 양상이 제시하는 방산 투자 우선순위의 재설정 방향은 다음 네 가지 핵심 축으로 요약된다.

첫째, 표적 탐지·식별 능력 강화를 위한 초격차 정보감시정찰(ISR) 자산의 체계적 전력화이다. 북한의 은밀한 이동식 미사일(TEL) 발사나 하이브리드 도발을 선제적으로 탐지하는 ISR 능력은 3축 체계의 성공을 결정짓는 ‘눈’이자 필수 전제조건이다. 압도적인 감시 정찰 자산으로 섞어 쓰기 방식으로 공격하는 적의 표적을 정확히 찾아내고 식별, 분류할 수 있다면, 물리적 타격 수단의 낭비를 막고 병력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가장 경제적인 작전 수행이 가능해진다. 현재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의 주력 UAV인 ‘송골매’는 노후화가 심각하여 작전 수행에 제한이 있으나 차세대 전력화까지의 간극을 메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이 전력 공백을 방지하지 않도록 상용 드론의 군사적 전용 등 단기적 보완 대책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 나아가 각 군이 개별적으로 ISR 전력을 구축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융합이 가능한 ‘합동성 중심의 통합 ISR 체계’ 발전에 투자의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

둘째, AI 기반 무인체계 및 대드론 방어 체계로의 집중 투자이다. 북한의 무인기 도발 사례와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확인된 현대전의 양상은 저비용·고빈도의 군집 드론 공격이 전면전의 문턱을 넘지 않으면서도 상대를 마비시키는 차세대 회색지대 위협의 핵심 수단임을 여실히 증명한다. 북한이 수백만 원에 불과한 상용 드론으로 수백억 원의 첨단 요격미사일을 소모하게 만드는 이른바 비용대 교환비의 비대칭성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은 지향성 에너지 무기(고출력 레이저, 마이크로파)와 전자교란을 활용한 소프트킬 방식의 저비용·고효율 요격 체계를 조기 전력화해야 한다. 동시에 우리 군 역시 AI가 통제하는 공격용 무인기 군집 전력을 선도적으로 확보하여 북한 지휘부에 대한 비대칭적 보복 타격의 우세를 점해야 한다.

셋째, 사이버 및 전자전 등 비물리적 타격 역량의 방산 안보 자산화이다. 북한 사이버 전력은 군

사 지휘망 교란이라는 전통적 작전 기능을 넘어 체제 생존에 필수적인 외화를 조달하는 수익 창출 기능을 겸비한 이중 목적 전력이다. 이는 사이버 공간이 지상·해상·공중을 지원하는 보조적 영역이 아니라, 레짐의 명줄을 끊을 수 있는 독립적이고 결정적인 전략 전장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방 R&D는 수동적인 방화벽 구축에 머물지 않고, 적의 네트워크에 미리 침투하여 도발 원점을 마비시키는 전진 방어 및 공세적 사이버 역지 능력을 확보하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 아울러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통제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강력한 전자기 스펙트럼 작전 체계 개발이 방산 투자자의 핵심 과제로 격상되어야 한다.[14]

넷째, 한국형 CMMC(방산 사이버보안 성숙도 인증제도) 구축을 통한 글로벌 방산 공급망 안보의 구조화라는 제도적 투자이다. 북·러 군사 협력의 심화와 권위주의 진영의 고도화된 기술 탈취 시도는 심각한 안보 위협이다. 그러나 이는 역설적으로 한국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사이버 안보 체계를 선제적으로 제도화할 수 있는 전략적 기회이기도 하다. 한국형 CMMC의 도입은 국내 방산 생태계의 보안 복원력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미국 CMMC 등 우방국의 보안 표준과의 상호인증(교차인증)으로 이어져 강력한 ‘사이버 방산 동맹’을 형성하는 계기가 된다. 나아가 한국의 인증 체계가 나토(NATO) 등 자유주의 진영의 공급망 표준과 호환됨으로써 창출되는 상호운용성은 한국의 안보 아키텍처를 사이버 영역으로 확장하는 지렛대가 된다. 이제 한국형 CMMC는 단순한 기업 규제를 넘어, 자유주의 진영이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안전한 무기고로서 한국의 지정학적 체급을 높이는 핵심 국가전략 수단으로 추진되어야 한다.[15]

6. 결론

본 논문은 북한 3대 정권의 군사력 포트폴리오 변화를 복합 포트폴리오형 레짐 생존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핵심 발견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북한의 군사력 고도화는 국제 정세 변화와 내부 정치적 동학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북한은 대외 환경 변화에 대응해 정권을 유지하고 통제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공격적인 군사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왔다. 연구 결과, 국제 구조가 무력 증강의 거시적 방향을 형성하더라도, 구체적인 자산 배분과 도발 수위는 지도자의 인지적 편향과 내부 엘리트 연합의 이해관계라는 내부 변수에 의해 주도되었음이 확인된다.

둘째, 학문적 관점에서 구조적 현실주의는 포트폴리오 전환의 방향성을 설명하나 구체적 내용은 지도자의 결정적 학습 경험, 이념 필터, 엘리트 연합의 이해관계라는 세 매개변수 없이는 도출되지 않는다. 아울러 이 세 매개변수가 구조 압박을 최소 역지를 초과하는 공세적 포트폴리오로 번역하는 패턴이 3대에 걸쳐 반복되었으며, 이 반복이 경로 의존적 구조를 형성하여 2022년 『핵 무력 정책법』 제정을 통해 비가역적으로 고착되었다. 이 포트폴리오는 단기 레짐 생존에 최적화되어 있으나 동시에 경제 잠식, 안보 딜레마 심화, 비핵화 봉쇄라는 장기 비용을 누적시키는 구조적 함정이다.

셋째, 방산안보 관점에서의 함의로는 북한 위협을 복합 비대칭 포트폴리오로 인식하는 틀의 전환, 속도의 안보 보장을 위한 동태적 기술상쇄, 비용 부과 전략을 통한 포트폴리오 유지 비용 증대, AI·드론·사이버 방어 역량 집중 투자, 한국형 CMMC 조기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물론 북한을 중심으로 한 연구는 북한 체제가 갖는 고질적인 폐쇄성으로 인하여 1차 사료 접근의 제한과 다각적인 매개변수 간의 독립적 상관관계를 정량적으로 완벽히 분리해 내기 어렵다는 방법론적 한계를 안고 있다. 아울러 2인자를 허용하지 않는 1인 지배 독재체제 하에서의 지도자와 엘리트 연합의 관계를 어느 정도 합리적인 관계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추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참고문헌

- [1] Haggard S, Noland M. *Hard Target: Sanctions, Inducements, and the Case of North Korea*. Stanford University Press. 2017.
- [2] Markowitz H. Portfolio Selection. *The Journal of Finance*, Vol. 7, No. 1, pp. 77-91. 1952. <https://doi.org/10.1111/j.1540-6261.1952.tb01525.x>
- [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알아봅시다 6·25전쟁사(제1권 전쟁의 배경과 원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6.
- [4] 선종률. 남북한 군비경쟁 양상 변화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 [5] Woo J. Kim Jong-il's Military-First Politics and Beyond: Military Control Mechanisms and the Problem of Power Succession.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 Vol. 47, No. 2, pp. 117-125. 2014. <https://doi.org/10.1080/09636419608429297>
- [6] Schelling T. *Arms and Influence*. Yale University Press. 1966.
- [7] Narang V. *Nuclear Strategy in the Modern Era: Regional Powers and International Conflict*.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4.
- [8] Waltz K.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Addison-Wesley. 1979.
- [9] Elman C. Horses for Courses: Why Not Neorealist Theories of Foreign Policy? *Security Studies*, Vol. 6, No. 1, pp. 7-53. 1996. <https://doi.org/10.1080/09636419608429297>
- [10] Jervis R. *Perception and Misperception in International Politics*.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6.
- [11] Solingen E. *Regional Orders at Century's Dawn: Global and Domestic Influences on Grand Strateg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8.
- [12] 조선중앙통신, 김영정 담화: 자위적, 대응적 수단으로서 핵은 영구불변, 비핵화는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불퇴의 선. 2026년 6월 18일.
- [13] 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 *Cost-Imposing Strategies: A Brief Primer*. 2014.
- [14] Nakasone P. A Cyber Force for Persistent Operations. *Joint Force Quarterly*, No. 92, pp. 10-14. 2019.
- [15] 김동선, 류연승. 미국 CMMC 제도 대응을 위한 통합실태조사 제도 개선 연구. *한국방위산업학회지*, 제29권 제3호, pp. 51-61. 2022. <https://doi.org/10.52798/KADIS.2022.29.3.4>